



미국 : 팁 노동자 임금 논쟁 다시금 제기

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임금규정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임금에 관해 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¹⁾ 레스토랑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나 바텐더와 같이 팁에 의존하는 팁 노동자의 기본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편이다. 8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는 팁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팁 노동자에게 감액 최저임금(최저임금에서 팁을 제외한 액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최소 550만 명의 노동자가 이 조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팁 크레딧 조항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컬럼비아 특별구, 메인주 및 미시간주 등에서 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감액 최저임금 정책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뉴욕주에서도 2025년까지

이원적 임금체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진보 정치인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경제분석 및 연구 네트워크 디렉터인 데이비드 쿠퍼는 이원적 임금체계가 일원화될 경우 장점도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레스토랑이나 바의 경우 임금상승이 가격상승과 매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한 부리또 레스토랑의 노동자인 탈리아 셀라는 현재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식품 비용 상승에도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안정된 삶에 있다고 주장한다.

1) The New York Times, "Battle Over Wage Rules for Tipped Workers is Heating Up", 2022.10.13.

미국 : 안전문제 제기한 아마존 노동자에 대한 정직 조치 논란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아마존 JFK8 창고의 비공인 노조에 따르면 화재사고 이후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창고 노동자 50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¹⁾ 노조는 이를 파업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화재는 10월 3일 오후 창고 하역장 압축기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야간근무 노동자

들은 사고 소식을 듣지 못했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 노동자들은 연기가 여전히 시설 내부에 남아 있다며 두통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창고가 안전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바로 일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그 날 저녁 100여 명의 노동자가 행진하며 급여를 받고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소방서가 건물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소방 당국은 건물 외부 화재에 대응했을 뿐 건물 내부 상태를 조사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아마존 노동조합은 화재로 인해 연기와 물이 흐른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화재의 잠재 여파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아마존은 핵심 노동 지도자들이 일선 노동자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위협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동자의 저항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노동자들의 행진에 대해 작업장을 직원이 점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1) CBS News, “Amazon Labor Union Says 50 Workers Suspended for Refusing to Work in “Unsafe” Staten Island Warehouse after Fire”, 2022.10.5.

미국 : 바이든 정부, 깃 노동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는 규정안 제시 예고¹⁾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 명의 깃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노동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연방법에 의해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미국 노동부 마티 월시 장관은 “독립계약자들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아왔다.”라고 하며 본 규정안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새 규정안은 가사노동, 트럭, 배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종사

하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연스레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깃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로 우버, 리프트와 같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거래량은 10%가량 줄어들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우버는 “우리 드라이버들은 독립계약자 신분에서 오는 유연성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13일부터 해당 규약에 대해 공청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1) CNN, “Proposed Labor Rule Could Give Millions of Gig Workers Employee Status”, 2022.10.11.

미국 : SOC Investment Group,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의 아동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제 제기¹⁾

노조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SOC Investment Group이 2022년 10월 19일 현대자동차에 서한을 보내 미국 내 부품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SOC Investment Group은 자산 규모 총 2,5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7월 로이터 통신에 의해 보도된 앨라배마 주 현대차 자회사(SMART Alabama LLC) 및 다른 지역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아동노동에 대해 투자자들이 깊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의선 회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이러한 아동노동 관련 이슈가 현대자동차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해당 서한에서 SOC Investment Group은 현대차 이사회에 회사의 대처를 감독하고 공급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노동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현대차 글로벌의 호세 무뇨즈 최고운영책임자는 현재 회사가 아동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와는 거래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1) Reuters, "Investor Group, Unions Push Hyundai to Address Child Labor at U.S. Suppliers", 2022.10.19.

독일 : 9월 물가상승률 10% 기록, 시간당 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9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0%로 195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높은 물가상승률은 주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9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43.9%, 식료품 가격은 18.7% 상승했다.¹⁾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와 에너지 부족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전쟁 발발 이전에도 팬데믹발 유통대란이 야기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더하여 독일 내 전문인력 부족

현상 역시 임금인상을 부추겨 물가상승을 부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라이프니츠 유럽경제연구센터(ZEW)에서 기업과세를 연구하는 프리드리히 하이네만은 현재 모든 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에서 예외 없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두 자릿수의 임금인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물가상승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10월 1일자로 기존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되어 물가상승 및 노동시장에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³⁾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올라프 숄츠 연방총



리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종전의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안 없이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동부 지역 노동

자 중 약 30%, 서부 지역 노동자의 약 16%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⁴⁾

- 1) Tagesschau, "Inflationsrate steigt auf 10.0 Prozent", 2022.9.29.
- 2) Tagesschau, "Was die Inflation für den Einzelnen bedeutet", 2022.9.29.
- 3) Focus, "Mehr Lohn, mehr Last", 2022.10.15.
- 4) Tagesspiegel, "Gehaltserhöhung für Millionen : Der Mindestlohn steigt auf zwölf Euro", 2022.9.27.

독일 : 화학 및 제약업계 임금협상 타결, 일시금 지급 및 7% 임금인상 합의

독일 광산화학에너지노조(IG BCE)와 화학산업 사용자협회(BAVC)는 새로 재개된 화학 및 제약업계 임금협상에서 3일 만에 빠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번 임금협상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노사 모두 최대한 갈등 없이 타협에 이르러간다는 점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어 있었다.¹⁾ 이번 협상 결과로 약 58만 명의 노동자가 두 차례에 걸쳐 각 1,500유로씩 1인당 총 3천 유로의 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며, 추가로 2회의 지속적인 임금인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2023년 1월 3.25%의 1차 인상 후 2024년 1월 추가적인 3.25% 인상이 적용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는 경영협약에 의해

위 임금인상을 각 3개월씩 연기할 수 있다. BAVC의 카이 벡만 협회장은 이번 임금협상 결과를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화학 및 제약 업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 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이들은 독일 내 가스 소비의 15%를 차지하며 산업용 가스의 약 3분의 1을 소비한다. IG BCE의 미하엘 바실리아디스 대표는 이번 임금협상이 다른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라며, 제대로 결정된 임금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전쟁에 대응하는 전 사회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²⁾

- 1) Tagesschau, "Tarifrunde vor Krisenszenario", 2022.10.17. IG BCE와 BAVC는 2022년 상반기 진행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몇 달간의 과도기를 위한 잠정적인 보상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합의는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임금인상 대신 1인당 1,400유로의 일시금을,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에는 1인당 1천 유로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 2) Tagesschau, "Lohnplus in Chemie-und Pharmabranche", 2022.10.18.

독일 :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층 증가¹⁾

독일 국민의 약 20%가 연간세후소득 16,300유로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는 유럽연합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EU 전체에 걸쳐 2021년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연간세후소득 16,300유로는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1,360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현재 독일의 빈곤 기준치인 월 1,250유로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월 빈곤 기준소득액(1,250유로) 미만에는 전체 독일 인구의 약 6분의 1이 분포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 약 40%의 보정세후소득²⁾이 22,000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정세후소득이 28,400유로 이상인 독일 국민도 40%를 넘지 않았다. 보정세후소득이 낮은 사례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독신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평균 이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를 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약 50% 이상이 22,000유로 미만의 연간 세후소득을 가지며, 약 1/3 정도는 연간세후소득

16,300유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가 소득이 더 낮았다. 2021년 한부모 가정의 약 2/3 수준이 연간세후소득 22,000유로에 미치지 못하였고, 반대로 연간세후소득이 38,100유로 이상인 한부모 가정은 약 6%를 넘지 않았다. 한편 자녀가 1명 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25% 정도가 보정세후소득 38,100유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직업군으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영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연간세후소득 38,100유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직업군 내 소득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종속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연간세후소득이 16,300유로 미만인 경우가 약 11%로, 전체 급여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최저 급여 그룹에 약 19% 이상이 분포하였다.

1) Statistisches Bundesamt, "Ein Fünftel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hatte 2021 ein Nettoeinkommen von unter 16.300 Euro im Jahr", 2022.10.5.

2) 보정세후소득(Nettoäquivalenzeinkommen)이란 가계총소득을 연령 등의 요인을 반영한 가계구성원별 인원가중치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다인가구 구성원과 1인 가구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한 소득 추정치(보정세후소득 = 가계소득 합계 / 가계구성원별 인원가중치 합계)이다.



독일 : 노동시간 기록의무에 대한 연방노동법원 판결¹⁾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은 2022년 9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근무한 노동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노동법에 따르면 연장근무나 일요일 근무시간만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총노동시간을 기록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14일 EU사법재판소(EuGH)의 결정(C-5/18) 이후 독일에서는 노동시간 기록의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만으로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은 사용자에게 노동시간을 특정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노동시간 기록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연방노동법원이 판결을 통해 해당 조항(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 제1호)을 근거로 노동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동시간 기록의무와 관련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로 인해 노동시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강화됨과 동시에 원격근로나 홈오피스와 같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신뢰기반 노동형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노동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소위 기본적인 의무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시간 기록의무를 도출하고 있으나, 일선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규정 부재로 어떠한 방식의 기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기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 Reihnische Post, "Arbeitszeiterfassung wird in Deutschland Pflicht", 2022.9.13.

영국 :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 전체 가구 중 약 20%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영국 주요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 RF)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

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급등해 연간 대출상환금 부담 수준이 가구당 평균 5,100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망치는 2023년 초순까지 기준금리

가 5% 이상으로 인상되고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도 급증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R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영국 전체 가구의 약 20%에 해당되는 510만 가구가 주택용자 상환 시 가중된 부담을 질 것으로 전망된다.¹⁾

구체적으로, 당장 2022년 4분기 중에 주택상환

금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170만 개로 추정된다. 고정금리형 상품에 가입한 차주들은 상품 내용에 따라 상환금 부담 증가 시점이 달라지는데 2023년 초까지는 총 210만 가구가, 2024년 말까지는 총 510만 가구가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1) The Guardian, "Five Million UK Families 'Face Mortgage Rising by £5,100 a Year by End of 2024'", 2022.10.15.

영국: 의료 위기상황... NHS 대기자 수 7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2022년 8월 기준 잉글랜드 내 치료 대기자 수가 사상 최초 700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국의 공공 의료체계가 만성적인 인력부족, 장비 및 시설의 노후화, 재정적자 문제로 신음해온 것은 사실이나,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로 과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고로 보수-자민당 집권 시점인 2010년의 대기자 수는 약 200만 명이었으며, 2020년 팬데믹 발발 이전 대기자 수는 약 400만 명대였다.¹⁾

이 외에도 2022년 8, 9월 NHS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에 띄는 수치들이 다수 발견된다. 약 38만 7천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주요 응급실을 방

문한 환자 중에 56.9%만이 네 시간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다. 암환자 중 72.9%만이 1차 진료를 받은 후 두 달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공급위기가 악화되는 데 대해 노동당, 자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등 주요 야당들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령, 자민당의 데이비 쿠퍼는 "바로 보수당 정부는 NHS 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으며 환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NHS 인력을 추가 고용할 적절한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 The Guardian, "Record 7 Million People Awaiting Hospital Treatment, Says NHS England", 2022.10.13; ITV, "NHS Waiting List Tops 7M for First Time ever as A&E Trolley waits Hit Record High", 2022.10.13.



영국 : 대학노조(UCU), 전국 단위 파업 찬반투표 가결

2022년 10월 24일 영국 대학노조(University and College Union, UCU)에서 전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파업 찬성률과 투표율 모두 2016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파업 찬반투표 기준선 - 투표 자격 있는 조합원 50% 이상의 투표 참여, 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 - 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영국 전역의 150개 대학과 7만 명의 대학 교직원들이 합법적으로 (민사면책이 되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합법적 쟁의 행위의 기준이 크게 강화된 이후로 영국의 교육부 문에서 전국적 단위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¹⁾²⁾

대학노조 측에서는 이번 역사적 승리가 그동안 대학 교직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대우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방증한다고 말한다. 가령, 2010년대부터 누적된 실질임금의 하락과 최근 9%대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대학 사용자 측에서는 올해 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학노조 측에서는 “12% 임금인상”과 “소매물가지수에 2%p를 더한 임금인상” 중 택일하여 임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노조에서는 대학 경영진 측에 연금급여액의 35% 하락이 예상되는 연금개혁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1) BBC, “University Staff to Strike over Pay and Pensions”, 2022.10.24; The Guardian, “UK University Staff Vote for Strike Action over Pay, Conditions, and Pensions”, 2022.10.24.
- 2)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영국 대학노조 파업의 쟁점과 양상에 대해서는 손동영(2021), 「신자유주의식 대학 개편과 영국 대학노조의 파업」, 『국제노동브리프』, 19(5), pp.64~77을 참조.

프랑스 :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 노조, 파업 3주째 지속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이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서의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프랑스 내 에너지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토탈에너지 노조 파업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작해 3주 차에 접어들었다.¹⁾

앞서 지난 2022년 10월 14일 토탈에너지 내 관리노조연합(CFE-CGC)과 노동민주동맹(CFDT)

두 노조는 임금 5% 인상과 3,000유로(한화 약 420만 6,270원)에서 6,000유로 사이의 특별 보너스 제공 등으로 사측과의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CGT는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측이 지난 2021년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CGT는 임금 인상률 10%

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규모와 관련해 토탈에너지는 정유소 및 연료 저장소 6곳에서 정규직 노동자 3,400여 명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에서 파업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

랑스 에너지전환부 아네스 파니에 뤼나세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2022년 10월 18일 기준 프랑스 내 주유소 중 22.8%가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²⁾

- 1) L'OBS, "La grève dans les raffineries TotalEnergies reconduite jusqu'à ce mercredi à la mi-journée", 2022.10.19.
- 2) Franceinfo, "Pénurie de carburant : Agnès Pannier-Runacher assure que "l'amélioration continue à se faire", 22,8% des stations-service perturbées mardi soir", 2022.10.19.

프랑스 : 교직원 임금,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2022년 10월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2(Regards sur l'éducation 2022)"에 따르면 프랑스 교직원 임금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 가령, "Capes"라 불리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고 15년의 경력이 있는 중학교(collège) 교직원의 경우, 프랑스 내 평균 연봉은 4만 3,133달러(한화 약 6,157만 2,35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OECD 내 평균 연봉은 5만 1,246달러(한화 약 7,315만 3,665원)로, 프랑스 교직원들이 약 16% 적게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임금 차이는 초등교육기관 종사자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프랑스 초등교육기관 교직원의 규정 연봉(salaire statutaire annuel)이 4% 인상됐지만, 15년 경력 직을 기준으로 프랑스 내 평균임금은 4만 43달러(한화 약 5,716만 1,382원)로 OECD 평균인 4만 9,245달러(한화 약 7,029만 7,237원)보다 약 19%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률 측면에서도 프랑스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초봉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데까지 프랑스에서는 약 35년의 경력이 요구되는 반면, OECD의 평균 근속 연수는 26년에 그쳤다. 프랑스 교직원들은 가장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OECD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 10년은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 1) Le Monde, "Les salaires des enseignants français en milieu de carrière inférieurs à ceux de la moyenne de l'OCDE", 2022.10.3.



프랑스 : 파산 내몰리는 국내 기업 폭증 ... 2019년과 유사¹⁾

2022년 10월 11일 프랑스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프랑스 내에서 약 3만 7천 개 기업이 파산했으며 2020~2021년 대비 34.4%의 파산 증가율을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가 줄어들면서 향후 파산 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3분기에는 약 5천여 곳의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에밀리 케마 중앙은행 이사는 해당 분기부터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이 본격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기업의 파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알타레스(Altares)에 따르면, 향후 3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소매

업과 요식업,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부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자재 수급 비용의 인상에 따른 건설업 부문의 중소기업 파산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타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과 소비감소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들며 특히 노동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파산을 우려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로 국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기업의 15%는 전액을 상환했거나 2022년 말까지 상환할 예정이지만, 약 7%의 기업은 현재 상환할 능력이 없어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한편 드니 르보쎬 채권추심 전문가는 2022년 기준 기업의 상장폐지율이 37%에 도달한 점을 들며 중소기업 파산의 주요 원인은 기업 부채의 누적보다 국가대출 상환시스템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했다.

1) Le Monde, "La hausse du nombre de faillites, presque au niveau de 2019, continue en France", 2022.10.12.

프랑스 : 2023년 노동부 예산, 완전고용을 목표로 67억 유로 추가 편성¹⁾

2022년 9월 26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노동부 예산은 약 300억 유로가 편성됐고 오는 2027년까지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7억 유로가 추가됐다. 이는 마크롱 정부의 두 번째 임기 내 개혁안 중 하나로, 2022년 예산에 비하면 직업연구개발과 기술

력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취업 연수생의 고용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100만 개의 실습 과정을 신설해 3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2022년 9월 12일부터 구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France Travail"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지원을 검토 중이

다. 끝으로, 사회 내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대노동소득(RSA)의 적극적인 개혁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현재 유럽의 에너지 수급 위기와 프랑스 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450억 유로를 투자해 치솟는 전기 및 가스비 인상을 억제할 예정이다. 이

와 관련해 민간기업에는 30억 유로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재향군인 지원과 경제부 예산을 제외하고 모든 정부부처의 예산은 예년 수준에 비해 증액된 점이 특징적인데, 노동부 67억 유로, 교육부 37억 유로, 보건부 21억 유로 등 예산이 늘었고, 2022년 여름에 열린 협상 이후 75억 유로가 전체 예산에 추가 편성되었다.

1) Le Monde, “Budget 2023 : 6,7 milliards en plus pour atteindre le plein-emploi”, 2022.9.26.

일본: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쟁의건수 기록¹⁾

후생노동성이 2021년 노동쟁의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297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고 총 60,389명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의 노동쟁의 건수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1957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297건의 노동쟁의 중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쟁의”는 55건으로, “반나절 이상의 파업”은 32건(722명 참가), “반나절 미만의 파업”은 36건(7,267명)이 발생하였다.²⁾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복지업에서 18건으로 가장 많은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제조업과 교육·학습지원업에서 각각 8건, 정보통신업에서 7건이 발생하였다. 행위 참여인원에서도 의료·복지업에서 5,708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제조업 1,054명, 도매·소매업 51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노동손실일수는 운송업·우편업에서 635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이 303일, 교육 및 학습지원업이 242일 순이었다.

노동조합의 중앙조직별로는 전국노동조합총연합에서 31건(7,415명)으로 쟁의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서는 10건(122명),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에서는 2건(19명)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였다.

297건의 쟁의 중에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임금으로 150건에 이르며 이는 전체 쟁의건수의 50.5%에 이른다(복수응답, 2개까지). 이 외에 “조합보장 및 단체협약에 관한 쟁의”가 137건(46.1%), “경영·고용·인사”가 96건(32.3%)으로 조사되었다.

1)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労働争議件数は297件で過去2番目の低さ——厚生労働省が2021年「労働争議統



計調査」結果を公表」, 2022.9.25.

2) 이 통계에서 “반나절 이상의 파업”과 “반나절 미만의 파업”을 전부 동반한 쟁의행위는 양쪽 모두에 집계하였다. 따라서 전체 총합은 단순 합산 값보다 작을 수 있다.

일본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위원장, 아베 전 총리 국장 참가로 내부에서 불만 커져¹⁾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렌고)의 첫 여성회장으로 주목받은 요시노 위원장이 2022년 10월 6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렌고를 지원하는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요시노 위원장이 국장 참가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요시노 위원장

이 국장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렌고 산하의 산별노동조합인 전국커뮤니티·유니온 연합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이례적인 사태로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렌고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장을 2번(4년) 연임하지만 요시다 회장은 일련의 사태의 영향으로 1기(2년)로 임기를 마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1) 毎日新聞, 「連合・芳野会長就任1年 国葬参列に募る不満、2期目はある?」, 2022.10.6.

브라질 : 인더스트리올 브라질, 노동 중심 산업정책 개입 본격화

금속, 화학, 토목 건설, 식품 및 의료 관련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인더스트리올 브라질이 탈산업화 극복과 노동 중심 산업정책 개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했다.¹⁾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Global Union)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세미나는 2018년에 마련한 “산업플랜 10+”를 지역 간부들과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준비되었다.²⁾ 산업플랜 10+는 향후 10년을 브라질의 산업 전환기로 보고, 이 과정

에서 제조산업의 발전 방향을 기술혁신,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맞춘 노조의 국가 재산업화 프로젝트이다. 아직 세부방안과 실행경로를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ILO가 2015년 발표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나아가는 정의로운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³⁾ 산업플랜 10+의 기본 방향은 국민 건강, 교육 및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기술개발과 혁신, 환경친화적 산업정책과 제조업 공급 가치사슬 재구축, 공정무역 촉진 및 천연자

원 활용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 생산·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 재활성화, 실질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노조는 이러

한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 1) CUT, “Brasil precisa de política para a reindustrialização, apontam entidades sindicais”, 2022.9.18
- 2) CUT(2018), “PLANO INDÚSTRIA 10+ Desenvolvimento produtivo e tecnológico”, <http://tidbrasil.org.br/> (2022.10.21). 이 제안서는 2018년 노동연구소(DIEESE), 브라질 노총(CUT), 금속산업연맹(CNM), 화학산업연맹(CNQ), 노동·산업·개발연구소(TID-Brasil), 상파울루 대학 및 ABC 연방대학이 팀을 꾸려 작성한 것이다. 산업플랜 10+는 2022년에 일부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다.
- 3) ILO(2015),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https://www.ilo.org/> (2022.10.20).

브라질 : 통계청, 재택근무와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 지표 발표

브라질 통계청(IBGE)은 월별 및 분기별로 발간하는 전국가구표본조사(PNAD Continua) 외에 정보통신 통계 보고서(PNAD TIC)를 2022년 말부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민의 일상생활 실태와 새로운 노동 및 업무 형태 통계를 제시하여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는 각 가구 및 개인의 디지털 신기술 스트리밍, 5G 및 인터넷 접근성, 재택근무 및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과 규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및 가구의 정보통신 관

련 조사 항목은 인터넷 접속 횟수 및 사용 목적이 메일, 전화, 쇼핑, 은행)이며 인터넷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와 플랫폼 노동 통계는 조사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위해 노동부 및 유니캄피(Unicamp)대학과 기술제휴를 통해 수행한다. 그동안 노동 전문가들은 전국가구표본조사가 공식-비공식 노동통계에 한정되다 보니 노동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재택근무나 플랫폼 노동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책 대안을 세우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새로운 통계 지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¹⁾

- 1) AGÊNCIA IBGE, “Nova PNAD TIC vai investigar streaming, 5G, internet das coisas, aplicativos e teletrabalho”, 2022.9.20.



브라질: 경기 회복에 힘입어 실업률 8.9%로 하락

2022년 3분기 실업률이 8.9%를 기록했다. 전 분기대비 0.9%p, 전년동기대비 4.2%p 하락하면서 실업자 수는 970만 명으로 2015년 12월 이래 가장 적었다. 취업자 수는 9,9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9%(730만 명)가 늘어 2012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1,200만 명, 가사노동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공식 고용은 3,600만 명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7.7%, 9.4% 증가했다. 기간제 및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직 노동자도 1,320만 명을 기록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무역,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3.0%, 56만 6천 명), 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 사회 서비스(2.9%, 48만 8천 명) 및 기타 서비스(4.1%, 21만 1천 명)에서 증가폭이 컸다. 자영업자는 총 2,59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가사 노동자는 59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5%(55만 7천 명) 증가했다. 비공식 노동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39.7%(3,930만 명)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다.¹⁾

1) AGÊNCIA IBGE, “PNAD Contínua : taxa de desocupação é de 8,9% e taxa de subutilização é de 20,5% no trimestre encerrado em agosto”, 2022.9.30.